

이낙연 “광주서 결선투표행 드라마 만들어달라”

“후보 확장성 대결”...무당·중도층 표심 관전
“호남은 대통령 배출할 수 없다는 편견 깨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예비 후보는 16일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또 한 번의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결선투표를 만들어 준다면, 민주당 본선 후보가 돼 광주시민께 가장 먼저 대선 승리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1%의 싸움이다”며 “후보의 확장성으로 대결해야 한다.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성이 있어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며 “확장성은 검증된 후

보만이 가질 수 있다. 검증이 끝난 후보, 도덕성에 흠이 없는 후보가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주 광주·전남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확정해 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 결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해달라. 그래야 민주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달라.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거부해달라”며 “광주·전남·전북이 전폭적 지지를 해준다면 부·울·경에서도 큰 지지를 받아 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이어가는, 광주가 지지하고 사랑하

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의원직 사퇴 진정성을 받아달라. 광주가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광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광주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구도 극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는 “지역구도가 과거보다 완화됐다. 청년세대에게는 위험구도이자 낡은 의식으로 받아들이나. 그 부분 희망이다”며 “호남인 여러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 맡고 있다. 변화가 과거 지역구도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열리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 TV 토론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황애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호4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선 돌풍으로 본선 이기겠다”

광주·전남 4.0시대 전초기지 조성...헌법재판소 유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예비 후보(사진)는 16일 “경선 돌풍으로 본선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지켜보고, 가치를 실현해 온 개혁 후보인 저를 지지해 경선 돌풍을 일으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윤석열이 1등이면 어때냐. 윤석열, 홍준표가 나오면 어때냐. 윤석열 잡는 추미애로 이미 실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 1년은 정치인생 26년의 1년일뿐이고, 나머지 25년은 환경 노동 산업 등 주력해서 많은 성과를, 개혁적 성과를 냈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비전을 말하는 후보 저 추미애의

진가를 광주·전남이 평가해주고 믿고 표를 주신다면 저는 본선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국가균형발전 4.0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지역 공약을 밝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개헌을 추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절기를 전진적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1987년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성과인 ‘헌법재판소’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유치하겠다”며 “국제 연대를 통해 광주를 아시아를 넘는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광주-나주-목포’ 일대와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자율 자동차, 우주산업을 융성해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은 하나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사회대개혁의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며 “용감하게 개혁의 관문을 헤쳐가겠다.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이뤄낼테니 믿고 광주·전남의 표를 달라”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황애란 기자

민형배, 내년 광주시장 불출마 선언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산)이 16일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 전략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선을 발판으로 광주시장 선거

에 나서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며 “대선 과정을 자연인 민형배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제외해주길 바라며, 이미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 입지자들 또한 저를 고려하지 않고 광주의 미래를 위한 경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적인 정책 마인드와 함께 강한 추진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추격자 대한민국을 선도자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시킬 정당하면서도 담대한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 지지를 호소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는 현직인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25일~26일 진행되는 광주·전남·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애란 기자

완도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우수한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한다. 완도 12개 읍면 전역은 40만 3,899ha로 완도 본섬과 55개 유인도, 210개 무인도로 이뤄졌다.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완도군은 생태적으로 우수성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국내외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유네스코에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의지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지역상생 협치모델 구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

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한국 농어업과 소멸위기의



농어촌 회생을 위한 대안중 하나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20대 국회에서부터 제기해 왔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상생의 협치모델’이 체계화 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형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지난 14일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처벌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등록 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불법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민 의원은 “불법 단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근절은 건설공사안전확보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